

금융위원회 위원장 말씀 참고자료

□ 여러분, 반갑습니다.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.

-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해 주신 금발심 위원분들, 관계기관장 및 실무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

□ 지난 금요일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식에서 대통령께서 채무조정과 관련하여,

- “건전한 신용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”는 지시를 하셨습니다.
-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채무조정과 채권추심의 개선을 위한 「서민·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방안」을 마련하여 논의하게 되었습니다.

< 추진배경 및 경과 >

□ 정부는 작년 6월 「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」(1차)을, 금년 1월에는 「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」(2차)을 마련하여,

- 정책서민금융의 공급확대 및 금리인하, 맞춤형 채무조정 활성화 등 서민층 금융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.

□ 이번에는 서민·취약계층이 채무로 인해 받는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,

- “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”에 중점을 둔 「3차 서민금융 지원방안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

□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의 유관기관 실무자 간담회*(5회), 현장방문, 반복민원 분석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발굴한 결과물입니다.

* 보증채무(7.28일), 채권추심(8.2일), 공·사채무조정 연계(8.4일), 개인워크아웃(8.9일), 성실상환자 인센티브(8.23일)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

⇒ 서민의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전달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기관장과 실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< 제도개선 주요내용 >

□ 그간 정부는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,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지원해 왔으며,

* 지원실적 : '13년 이후 (신복위) 27.6만명 / (국민행복기금) 52.3만명

- 불법 채권추심을 집중 관리·감독함으로써 추심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.

-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많은 분들이 “연체의 늪”에서 빠져나와 자활·재기를 위한 도움을 받으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

- 그러나, 그동안 채무조정 제도가
성실하게 상환하는 서민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해
상환을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,
 - 과도한 추심에 따른 민원도
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.
- 따라서, 이번 대책은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
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도 내실화하는 동시에,
 - 국민행복기금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점들을
적극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.
 - 또한, 채권추심과 관련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
채무자의 권리능력을 제고함으로써
건전한 추심 관행을 정착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.
-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
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
채무자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
일정부분 부담을 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.
 - 따라서, 성실상환자에 대해
자산형성 상품 제공 등 금융지원 확대를 비롯한
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,
 - 채무조정자의 성실상환을 유도하고
채무조정이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

- 더불어,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 소득정보 등을 통해
상환능력을 분석한 후 탄력적으로 원금감면을 확대하고,
취약 채무자가 핸드폰을 할부로 구입할 수 있도록
보증도 지원할 예정입니다.
 - 국민행복기금의 운영에 있어서도
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등 과도한 추심을 방지하고,
주채무자가 상환을 완료하면 그 효력을 보증인에게도
동일하게 적용하겠습니다.
-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 정착을 위해서는
금융회사 등 채권자의 추심행위 관련 규율 및
대출채권 매각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,
채무자의 불법추심 대응능력을 제고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.
 - 추심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를 위해
대부업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
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,
추심 위탁자의 관리·감독책임을 강화하며,
이에 대한 검사·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.
 -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권자 변동에 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,
불법추심 대응요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,
채무자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 - 또한, 대출채권 매각시 준수해야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
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도 채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
관리하겠습니다.

< 향후 계획 >

- 한편,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정부는 서민금융의 핵심영역인 ①지원대상 선정, ②상품개발, ③전달체계 혁신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.
- (지원대상 선정) 서민의 상환능력과 재기의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서민금융의 지원대상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
 -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여 서민금융DB로 모으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평가기법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.
- (상품 개발) 유사하고 복잡한 서민금융 상품체계를 수요자 위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.
 - 브랜드를 통일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수요자 특성이나 자금용도별로 필요한 상품을 빠짐없이 만들겠습니다.
- (전달체계 혁신)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“원스톱 서비스” 전국망이 구축되는 만큼,
 - 앞으로 상담기능 강화 등을 통한 “종합 맞춤형 서비스”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

< 금번 회의의 취지 >

- 오늘 자리는 「서민·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방안」에 대해 금발심 위원분들의 고견을 듣고 관계기관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반영하여,
 - 금번 방안과 관련한 보완사항 및 제도시행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.
- 바쁘신 일상에도 시간을 내어주신 금발심 위원분들, 관계기관장 및 실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, 그간 서민금융에 대해 느끼셨던 점 등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참석자 논의 진행 후 마무리 말씀 (☞ 뒷면 계속)

마무리 말씀

- 여러분, 정부가 가장 잘 하고, 가장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이 바로 '서민금융'입니다.
- 오늘 발표하는 「서민 채무부담 경감방안」을 통해 저소득·저신용 서민과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빠른 시일내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논의한 세부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.
 - 이를 위해 관계기관간 원활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, 참석해 주신 관계기관장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.
- 특히, 성실상환자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확대는 건전한 신용질서의 틀 내에서 채무조정이 자활·재기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하는 만큼 금년중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 - 더불어 채권추심행위 규율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전이라도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건전한 추심 관행을 유도하겠습니다.
- 또한,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향후 정부는 서민금융의 핵심영역인 ①지원대상 선정, ②상품개발, ③전달체계 혁신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.

- 이를 위해 위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. 관계기관과 전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.
-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금발심 위원분들, 관계기관장 및 실무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※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.